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7-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31 민사부

#### 판 결

사 건 2020가합574910 전직금지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양기오, 이경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임창주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2021. 8. 19.까지 C 유한회사(C)를 비롯하여 D 주식회사(D) 및 위 회사의 계



열사, 국내사무소, 영업소, 지점에 근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과학에 관련된 시약 및 기기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3. 5. 1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8. 19.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경 미국 회사로 생명과학연구용 실시간 세포분석기 및 유세포분석기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E, 이하 'E'라 한다)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E 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팀에 소속되어 E 제품 영업 등을 담당하였고, 퇴직 당시 원고의 Cell Science 영업팀 부장대우이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서 근무하던 2018. 10. 2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재직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오직 원고만이 이를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가. 기술, 제품, 부품, 소재의 연구개발 및 기획, 설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실험데이터와 영업정보 등의 모든 정보
  - 나. 연구개발 계획, 승인, 진행관리, 완료 및 결과, 국내·외 거래선의 진행사항 등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원가계산 및 원가분석에 관한 정보 포함)
  - 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을 작동시키거나 각종 실험에 적용, 응용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정보
  - 라. 원고 경영관리 활동 제반(재무, 원가, 복지, 급여, 조직, 인사, 연구, 관리, 기획, 중·단기



사업계획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마. 국내외 거래선, 타사, 타사 연구소, 대학(교), 병원 등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 기관과의 영업 및 기술제휴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

바. 기타 원고가 비밀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유·무형의 모든 정보로서 원고의 업무 중 알게 된 특정 제품의 고객 리스트 및 잠재적 고객 리스트, 특정 거래처의 영업상의 노하우, 원고의 비용을 들여 지득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경쟁 우위 정보·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 원고의 제품 개발 계획, 원고 자체 제작 제품의 도면·성분·부품 구입처 리스트 등 원고가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영업·기술·경영상의 모든 정보

7.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3자 및 경쟁사에 무단 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사 후 2년 동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유사의 경쟁사, 원고의 외국 공급선 및 그 한국 지사, 대리점에 취업하거나 협력관계를 갖지 않는다.

라. D 주식회사(D, 이하 'D'라 한다)는 E와 F 주식회사(F, 이하 'F'이라 한다)를 인수한 뒤, 2019. 11.경 원고에게 E 제품에 관한 국내 위 판매대리점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 위 판매대리점계약이 2019.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9. 7. 1.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9. 8. 19. 원고를 퇴직한 후, 2019. 12.경 F의 한국지사인 C 유한회사(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이다.

바. D는 2020. 1. 1.부터 이 사건 회사를 통해 E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2,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경쟁회사 등에 전직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가 원고의 Cell Science 영업팀에서 장기간 원고의 E 제품 영업을 전담한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지원 아래 국내 및 해외 출장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이 과정에서 E 제품에 대한 특징점은 물론 거래처별 거래 진행 현황, 사용정보, 가격 및 견적 등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 원고의 판매전략, 고객정보 사후관리방법 및 마케팅 노하우 등 원고가 비밀리에 관리하는 중요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정보는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2019년 초부터 계획적으로 비밀리에 준비하여 2019. 12.경 이 사건 회사에 전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이 사건 회사 등에서의 근무금지와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내지 중요한 정보는 그 내용이나 판매점대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경업금지약정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한 점, 원고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 전직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 3.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7 내지 23, 2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서 E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영업사원으로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동종 회사에는 없는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 정보나 고객 관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수에 단순한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퇴직 후 2년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



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E 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원고와 E 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E에 국내에서의 E 제품 판매, 배포, 영업, 광고와 관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기록, 파일, 데이터,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 및 잠재고객 리스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E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 원고의 판매전략, 영업노하우 등이 피고가 E를 인수한 D나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전직을 준비하였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후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7-29

재판장      판사      김지숙

            판사      정교형

            판사      공우진